

# 금속법률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발행인 : 김태욱 | 이메일 : kctulaw@hanmail.net

## 창조건설팅 노조파괴 노무사,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5고단2030 판결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무법인 창조건설팅 소속 공인노무사인 심종두, 김주목이 유성기업 유시영 등,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강기봉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창조건설팅이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방조범)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건설팅은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고, 노무사 심종두, 김주목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에 처해져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창조건설팅과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이 노조파괴 컨설팅 계약과 함께 거액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건설팅이 지회의 파업, 직장폐쇄, 조합원 선별복귀, 복수노조 및 조직형태변경 제도 악용, 어용노조 설립, 지회 간부 부당징계·해고 등 갖은 방

법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도록 컨설팅하였고, 자신이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과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기봉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을 남용하여 노동3권을 파괴하려

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3권 파괴를 돈벌이로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 1년 2개월에 그친 것은 문제입니다.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2년에 불과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노조파괴의 최대 피해자인 금속노동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 소수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배제 안된다

대전지방법원 2018. 7. 26.자 2018카합50332 결정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은 소수노동조합인 지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와 개표시 지회 조합원들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속노조에게 3,000만원, 조합원들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 참여시키고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는

것은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소수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와 개표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안에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가처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 노조할 권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098 판결 등

2018. 8. 16. 서울행정법원은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판매사원(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대리점들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노동조합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조합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2015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각 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대리점들은 판매사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게다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하며 길거리로 내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판매노동자들은 수년간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갔는데, 이들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으로부터 2년여 만에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판매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지역지부 지회로 편제되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매사원들이 판매대리점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주된 소득을 대리점으로 부터 얻고 있으며, 계약 내용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고, 고정급여, 퇴직금이 없고,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따져 판매사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노조할 권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할 권리 확보에 관한 투쟁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삼성노조과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



2018. 8. 17. 국회의원회관.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조법의 한계와 입법안 발제.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비호 검찰규탄 정몽구, 정의선 처벌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2018. 8. 7. 대검찰청 앞. 14년째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규탄.